

연구개발 투자 인색 ... 財源 확보 시급

- 科技處 발표, 1991년 연구개발 투자 동향

최근 몇년간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율이 10% 내외로 둔화되고 있어, 기술선진화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기처가 추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3조2천1백 43억원(8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투자증가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0.2%로, 8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인 24%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年度別 연구개발 투자 추이

年	연구개발 투자		GNP 対比(%)	정부처민간 부담비율
	비용(億원)	증가율(%)		
1981	4,486	11.6	0.81	55 : 45
1982	6,058	35.0	1.02	50 : 50
1983	7,383	21.9	1.11	34 : 66
1984	9,450	28.0	1.29	28 : 72
1985	12,371	30.9	1.58	25 : 75
1986	15,631	26.4	1.77	23 : 77
1987	18,658	19.4	1.87	25 : 75
1988	21,776	16.7	1.94	21 : 79
1989	23,754	9.1	1.99	20 : 80
1990	25,533	7.5	1.95	19 : 81
1991	28,580	11.9	2.02	20 : 80
1992	32,143	12.5	2.12	20 : 80

(* 1985년 불변가격 기준, 1992년 : 추정치)

지난 91년의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는 약 55 억불로 미국의 26분의 1, 일본의 15분의 1에 불과하고, 미국의 1개 업체인 GM사의 투자규모인 58억불에 미달되는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는 오는 2001년의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5%까지 확대해 목표연도에는 영국의 수준에 버금가는 4백억불 규모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정부 총예산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을 현재의 2% 수준에서 98년까지 5%로 확대하기 위해, 일반예산중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을 일정률 이상으로 제고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6년까지 1조원을 목표로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차질없는 조성과 함께 국방예산에서 연구개발투자부문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고속전철, 영종도 新공항 건설사업등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일부를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과학기술진흥법에 명시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설립법에 기술개발투자 하한선을 법정화하는 제도적 장치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의 강화 및 공공구매의 촉진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論文 실적 지난해 「세계30위」

- 중국(15위), 대만(24위)에 크게 뒤져...

지난 한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주요학술지에 2천4백 61편의 논문을 발표, 국제순위에서 30위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쟁국인 중국, 대만에 뒤지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1백3분의 1, 일본의 21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나라 이공계대학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민간회사인 과학정보 연구소(ISI)가 세계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출판되는 3천2백여종의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과 토의자료등 67만6천편의 과학논문색인(SCI)을 토대로 과기처가 분석,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1년(32위)보다 35%(643편)가 증가하여 30위로 기록되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결과가 과학기술 육성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지만, 이에대한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범정부차원의 투자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 과학기술논문 발표數

순위	국 가 명	1992년	1991년
1	미 국	254,373	224,955
2	영 국	62,027	53,664
3	일 본	51,772	44,521
4	독 일	47,380	40,412
5	프 랑 스	36,418	30,102
15	중 국	8,481	6,630
24	대 만	4,199	2,815
30	한 국	2,461	1,818
39	홍 콩	1,288	965
48	태 국	481	456
50	말 聯	366	328
84	북 한	4	5

“유기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필요”

- KIST 과학기술 개발전략 세미나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책기획 본부가 2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新한국의 과학기술 개발전략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河斗鳳 서울대학교수는 「국가차원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河교수는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같은 분명한 실현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종합선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정책기획본부의 鄭聖哲 박사는 「국가연구개발의 합리화방안」이란 발표에서 『연구개발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鄭박사는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집행-관리등의 기능을 과학기술 주관부서로 모아서 기술혁신의 각 단계간에 조직적인 연계를 이루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때 과학기술 주관부서는 정책집행이나 예산배분 조정권도 갖게 된다.

그러나 단일부처로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鄭박사는 국회에 과학기술전문기구를 두어 정책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국가출연연구소를 성격에 따라 미래지향연구소, 공공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로 분류하여 운영 및 평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이 국가경영의 핵심이 되려면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李佳鐘 국민대교수는 『과기처는 총괄조정 기능을 잃고 연구소 관리부로 전략했다』면서, 『과기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경제기획원의 기획 기능과 상공부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업무 및 일부부처의 첨단산업기술 운영관리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